

# 서울경기지역 대학생의 위기임신 지원정책 지지도 조사

## Research on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이설아\*, 김희숙\*\*, 권오용\*\*\*, 엄주희\*\*\*\*

인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예인법률사무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Seol-Ah Lee(1026lsa@naver.com)\*, Hee-Sook Kim(kimhs02041@hotmail.com)\*\*,  
Oh-Yong Kweon(ilogos\_oyong@msn.com)\*\*\*, Ju-Hee Eom(juheelight@gmail.com)\*\*\*\*

### 요약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 중심어 : | 임신 | 위기중재 | 정책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 in Seoul and Gyeonggi-do. All support rates of the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policies were high, including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the preventive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sex education and the law revision to compensate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system. There was supportive attitude for all adolescent single parenting policies. Especially, parent educ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and education for prevent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rom recurrent pregnancy showed a little higher support rate than others. Having a religion showed a higher support rate than atheist. Based on these findings,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policies of a crisis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e policies of unmarried adolescent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vision of relevant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services.

■ keyword : | Pregnancy | Crisis Intervention | Policy |

\* 이 논문은 주사랑공동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1월 19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07일

교신저자 : 김희숙, e-mail : kimhs02041@hotmail.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간 ‘숨진 신생아를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 검거’, ‘의류 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20대’ 등 충격적인 신생아 유기사건들이 대폭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2]. 사건들은 미혼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영아유기 사건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한편, 한 종교 단체에서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설치한 베이비박스 또한 매스컴을 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가 급증하면서 본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입양특례법은 자신의 출생과 부모에 관한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존중해 개정되었으나, 미혼모가 직접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입양선택을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상의 문제가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대립되어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3].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영아유기 사건 외에도 결혼제도 밖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회문화적 인식은 여전히 미혼모가 가지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미혼모부자 가정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미혼모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미혼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문가의 94.3%가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차별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미혼모의 차별문제 이면에는 보수적인 성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해 남성보다 취약하며, 성과 혼전임신 이슈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처럼 영아유기 문제를 둘러싼 종교적 신념의 대립과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2001년 11.0%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66.4%에 이르러 약 10년 사이 6배가량 증가하였다[6]. 이 같은 변화와 함께 미혼

모정책의 방향이 입양 중심에서 친모에 의한 직접 양육을 유도·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7]. 현재 전국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17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위기임신에서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여전히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척과 낙인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입양을 선택해야 하는 미혼모의 영아유기 문제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부자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이 미혼모·부의 출산과 양육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성권과 부모에게 양육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와 같이 미혼모가 가정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입양특례법이나 미혼모부자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개정 등은 위기임신과 출산 및 출산 이후 미혼모의 자녀입양 또는 양육 결정에 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혼외임신 인지 이후 미혼모의 내적갈등이 가장 심각한 위기임신기간과 출산의 과정을 지원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9],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결정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혼모부자가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3]. 나아가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미혼모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5][9].

더불어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며[10], 여전히 24세 미만의 미혼모는 자녀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낮은 연령층의 미혼모는 타 연령층에 비해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임신과 출산 및 이후 양육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 쉽다. 최근에는 미혼모의 연령이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6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미혼모의 22%(5,356명)가 10-20대 미혼모이며 여전히 타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이

미혼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 현행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청년층을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으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13].

미혼모 인구통계와 관련 정책의 개정은 10대와 20대 성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고등학교 때 첫 성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 입학 후 순으로 대학에 입학한 직후 남녀 모두 약 1/4정도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대학생 중 남학생의 71.5%, 여학생의 60.2%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경험 예측 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농촌보다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유의하게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위기임신과 청소년미혼모 지원 정책에 관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위기임신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위기임신지원센터(Crisis Pregnancy Center, CP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연구들은 대부분 위기임신지원센터가 위기임신 중인 여성과 청소년에게 성지식과 피임[16], 낙태 후유증[17]을 포함한 위기임신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에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18][19]. 청소년미혼모에 관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10대 미혼모가 지역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노동시장 참여에서 일정정도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21], 멕시코에서도 10대 미혼모들은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 학업중단과 이로 인한 ‘신분과 지위의 박탈’ 또는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이처럼 국외 위기임신에 관한 연구들은 관련 서비스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에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독일과 덴마크 등의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미혼모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3]. 그러나 이처럼 의료 및 모성 보호 등의 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선별적 복지 형태를 띠는 한국에서는 위기임신 및 양육미혼모에게 적합한 별도의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24],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책 수혜대상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용해야 정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위기임신 및 양육결정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 미혼모 관련 종사자 및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가 주로 이뤄져 왔다. 미혼모의 위기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25-27]와 미혼모의 양육결정 및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28-31]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미혼부모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미혼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령 및 제도[32],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8][26][33]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학업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34],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에 대한 교사 인식[35],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36] 및 자립형 보호시설 연구[37]가 수행되었다. 이에 반해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10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관점의 인식[38]과 미혼부모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39]가 이뤄져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미혼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정작 위기임신 및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임신과 출산 정책의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기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것이다.

더불어 성별과 종교 유무에 따라 위기임신 및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에 있어 여성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보수적인 한국사회[5]에서 위기임신과 출산 및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성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낙태반대와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지지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기관이 종교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3] 고려하면, 위기임신과 출산 및 청소년 한부모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종교적 신념과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연구목적

- 1) 미혼 청년대학생의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지지를 파악하고, 성별과 종교에 따른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미혼 청년대학생의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를 파악하고, 성별과 종교에 따른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의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관한 지지도를 살펴보고, 성별과 종교에 따른 정책 지지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의 Y대학교와 경기도 D대학교 소속의 미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12]에서 미혼모 중 10-20대가 다수인 점과 현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인 점[13]을 감안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미혼인 대학생으로 정의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40], 유의수준  $\alpha$  .05, power .80, effect size medium, t-test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는 128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136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책 지지도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문항은 정부의 낙태관련 정책 지지도 척도[39]를 기준으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평가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생명윤리 전문가 2인과 모성간호학 교수2인이 수행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는 ‘매우 타당하다’ 4점, ‘대체로 타당하다’ 3점, ‘별로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문항은 .80 이상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보여 10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7로 나타났다.

### 2)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4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42]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43], 엔젤맘 프로젝트[44] 및 관련 선행연구[45-46]를 기초로 구성된 척도[39]를 사용하였다. 총 1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로 측정된다. 척도의 총점 범위는 최저19점에서 최대95점으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0으로 나타났다.

####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편의표집으로 서울의 Y대학교와 경기도 D대학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8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설문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3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과정 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보장, 개인 비밀보장, 중도포기 및 거부의 가능성,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완료 후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와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각 지원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각각 남성 30명(22.1%), 여성 106명(77.9%)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1세였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명(47.1%),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2명(52.9%)이었다[표1].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36)

특성	분류	수(명)	비율(%)
성별	남성	30	22.1
	여성	106	77.9
연령	범위	18~29	
	M±SD	21.1±2.6	
종교	있음	64	47.1
	없음	72	52.9

\*missing=3

#### 2.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

##### 가. 전반적인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

위기임신과 출산관련 정책 지지도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 40.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4.3±0.7)’,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4.2±0.7)’,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4.2±0.7)’순으로 정책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위기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상담

표 2.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

(N=136)

문항 (1-5점)	전체 M(SD)	성별			종교		
		남 M(SD)	여 M(SD)	차이 t(p)	없음 M(SD)	있음 M(SD)	차이 t(p)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	4.3(0.71)	4.1(0.85)	4.3(0.65)	-1.92(0.06)	4.2(0.73)	4.4(0.66)	-1.91(0.06)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4.2(0.73)	4.0(0.95)	4.3(0.64)	-2.10(0.04)	4.2(0.65)	4.2(0.81)	-0.58(0.56)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 비밀보장, 24시간 온오프라인 상담제공	4.2(0.75)	4.0(0.64)	4.2(0.78)	-1.09(0.28)	4.1(0.82)	4.2(0.65)	-1.22(0.23)
교사와 상담가용 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훈련	4.0(0.82)	3.8(1.11)	4.1(0.71)	-1.52(0.13)	4.0(0.86)	4.1(0.78)	-0.58(0.56)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	4.0(0.82)	3.8(0.83)	4.1(0.81)	-1.71(0.09)	3.8(0.85)	4.3(0.73)	-3.29(<0.01)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	4.0(0.73)	3.9(0.77)	4.0(0.73)	-0.72(0.48)	3.9(0.77)	4.2(0.65)	-2.56(0.01)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	4.0(0.80)	3.9(0.87)	4.0(0.78)	-0.92(0.36)	3.9(0.85)	4.2(0.72)	-2.11(0.04)
현행 법령제도 보안을 위한 유기관련 법제위원회 운영과 법 개정	4.0(0.80)	3.9(0.76)	4.0(0.81)	-1.01(0.32)	3.9(0.74)	4.1(0.77)	-1.99(0.05)
생명사랑, 자발적인 안전한 성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도모	4.0(0.77)	3.9(0.87)	4.0(0.74)	-0.54(0.59)	3.9(0.74)	4.0(0.80)	-1.12(0.27)
위기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상담제도	3.6(1.63)	3.4(1.83)	3.7(1.57)	-0.81(0.42)	3.6(1.55)	3.6(1.72)	-0.17(0.87)
총점(10~50점)	40.6(6.29)	39.0(7.61)	41.1(5.83)	-1.62(0.11)	39.6(6.22)	41.7(6.25)	-1.92(0.06)

제도(3.6±1.6)'는 정책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2].

**나. 성별에 따른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

성별에 따른 위기임신과 출산관련 정책 지지도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성(41.1±5.8)'이 '남성(39.0±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t=-2.10, p=0.04)'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4.3±0.6)이 남성(4.0±0.9)보다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2].

**다. 종교에 따른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

종교유무에 따른 위기임신과 출산관련 정책 지지도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41.7±6.2)'가 '종교가 없는 경우(39.6±6.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t=-3.29, p<0.01)',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t=-2.56, p=0.01)',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t=-2.11, p=0.04)' 문항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아유기관련 정책 중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 항목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무종교보다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2].

**2.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

**가. 전반적인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는 9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 71.4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영유아 돌보기 부모교육(4.2±0.6)',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직업상담·훈련·알선 등을 지원(4.2±0.7)', '청소년 미혼부

모 재임신 예방교육(4.0±0.8)'순으로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소송<sup>1)</sup>을 할 경우 소송비 전액 지원(3.0±1.0)'은 정책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3].

**나. 성별에 따른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

성별에 따른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 전체 평균점수는 '여성(71.6±10.4)'이 '남성(70.7±10.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부모와 자녀의 친자 검사비 지원(t=2.06, p=.04)'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성(3.5±0.9)이 여성(3.1±1.0)보다 '청소년 미혼부모와 자녀의 친자검사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다. 종교에 따른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정책 지지도**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73.5±10.6)'가 '종교가 없는 경우(69.5±9.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t=-2.30, p=.02).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부모 재임신 예방교육(t=-2.62, p=.01)',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생필품구입비 지원(t=-3.01, p<.01)',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병원 진료비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t=-2.62, p=.01)',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미혼부모의 아동 보육료 지원(t=-2.44, p=.01)',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시설 확충(t=-2.03, p=.04)', '청소년 미혼부모의 검정고시 비용지원(t=-2.21, p=.02)', '청소년미혼부모의 자산형성지원(t=-2.31, p=.02)'문항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 미혼부모 재임신 예방교육',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생필품구입비 지원',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병원 진료비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부모의 아동 보육료 지원',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시설 확충', '청소년 미혼부모의 검정고시 비용 지원', '청소년 미혼부모의 자산형성지원' 문항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무종교 보다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

1) 혼외 출생자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혼외 출생자와 그 법정 대리인(어머니)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표 3.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

(N=136)

문항 (1-5점)	전체 M(SD)	성별			종교		
		남 M(SD)	여 M(SD)	차이 t(p)	없음 M(SD)	있음 M(SD)	차이 t(p)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영유아 돌보기 부모교육	4.2(0.66)	4.1(0.80)	4.2(0.61)	-1.27(0.20)	4.1(0.62)	4.2(0.70)	-0.76(0.44)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직업상담·훈련·알선 등을 지원	4.2(0.71)	4.1(0.79)	4.2(0.69)	-0.34(0.73)	4.10(0.61)	4.33(0.80)	-1.87(0.06)
청소년 미혼부모 재임신 예방교육	4.0(0.86)	3.9(0.85)	4.0(0.86)	-0.88(0.37)	3.8(0.84)	4.2(0.84)	-2.63(0.01)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자퇴휴학·전학 강요 전면금지	3.9(1.01)	3.8(1.18)	4.0(0.96)	-0.89(0.37)	3.9(1.01)	4.0(1.01)	-0.92(0.35)
청소년 미혼모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3.9(0.73)	3.93(0.74)	3.9(0.74)	-0.25(0.80)	3.9(0.72)	4.0(0.76)	-1.01(0.31)
청소년 미혼부모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설립	3.8(0.86)	3.9(0.83)	3.8(0.87)	0.47(0.63)	3.7(0.90)	3.9(0.81)	-1.50(0.13)
청소년 미혼부모 생필품구입비지원	3.8(0.85)	3.7(0.88)	3.9(0.84)	-1.12(0.26)	3.6(0.83)	4.0(0.82)	-3.01(0.01)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병원 진료비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	3.8(0.83)	3.6(0.88)	3.9(0.81)	-1.39(0.16)	3.6(0.82)	4.0(0.81)	-2.62(0.01)
공동생활사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부모의 아동 보육료지원	3.8(0.78)	3.7(0.82)	3.8(0.77)	-0.62(0.53)	3.6(0.73)	4.0(0.81)	-2.44(0.01)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시설 확충	3.8(0.80)	3.6(0.84)	3.8(0.79)	-1.33(0.18)	3.7(0.81)	3.9(0.77)	-2.03(0.04)
청소년 미혼부모의 검정고시 비용 지원	3.7(0.98)	3.7(0.94)	3.7(1.00)	0.15(0.88)	3.5(0.93)	3.9(1.01)	-2.21(0.02)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3.7(0.83)	3.7(0.77)	3.7(0.84)	0.18(0.85)	3.7(0.85)	3.7(0.81)	0.31(0.75)
청소년 미혼부모 가정결연 지원사업	3.7(0.82)	3.5(0.97)	3.7(0.77)	-1.05(0.29)	3.6(0.79)	3.7(0.85)	-0.59(0.55)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매일 아동양육비 지원	3.6(0.94)	3.47(0.97)	3.71(0.93)	-1.24(0.21)	3.6(0.83)	3.6(1.06)	-0.20(0.83)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제도	3.6(0.88)	3.4(0.97)	3.6(0.86)	-1.21(0.22)	3.6(0.83)	3.6(0.95)	-0.01(0.99)
청소년 미혼부모의 자산형성지원	3.6(0.90)	3.5(0.86)	3.6(0.92)	-0.29(0.76)	3.4(0.84)	3.8(0.95)	-2.31(0.02)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미혼부모를 위한 출산휴가	3.4(1.13)	3.6(0.99)	3.3(1.17)	1.27(0.20)	3.3(1.13)	3.4(1.14)	-0.48(0.62)
청소년 미혼부모와 자녀의 친자 검사비 지원	3.2(1.05)	3.5(0.97)	3.1(1.06)	2.06(0.04)	3.0(0.95)	3.3(1.14)	-1.77(0.07)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녀양육비 및 인지 청구소송시 소송비 전액 지원	3.0(1.04)	3.2(1.13)	3.0(1.01)	0.93(0.35)	2.9(0.93)	3.1(1.14)	-1.52(0.13)
총점(19-95점)	71.4(10.38)	70.7(10.40)	71.6(10.42)	-0.45(0.65)	69.5(9.86)	73.5(10.61)	-2.30(0.02)

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3].

#### IV. 논의

본 연구는 영아유기와 관련된 위기임신 관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따른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임신 지원 정책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교사와 상담가용 성교육 매뉴얼 개발', '산부인과 상담제도'를 통한 계획임신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임신을 지원하는 상담 핫라인'과 '위기임신 지원센터' 및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위원회 운영과 법 개정'에 대한 정책 지지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성에 관한 교육과 의사결정, 학생들을 지도할 대상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성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연구들은 청소년 대상 성교육이 규범적인 내용에 그쳐 실제 성의식이나 성행위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대처방안 모색은 부재한 것으로 보고해 왔다[47].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제 이성교제에서 필요한 성 에티켓, 성관계와 임신 및 출산의 책임에 관한 실질적인 성교육 교안의 마련 및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미혼부모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부모 대상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정책 간의 상대적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돌보기 부모교육'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이어서 '직업상담·훈련·알선 지원', '재임신 예방교육'이 높은 지지도를 보여 청소년미혼부모의 부모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자립[38]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자퇴나 휴학 강요 금지',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설립' 등의 학업지속 정책[34-35]과 '미혼모의 산전 후 건강관리', '아동의료비 지원' 등 건강 관련 항목 및 '생필품구입비지원', '미혼모·부의 생활시설확충' 등 생활지원 정책

[36-37]에 높은 지도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 부모 지원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직접적 현물급여보다는 학업, 취업 등의 사회적 자립 활동과 아동과의 생활에 필요한 의료 및 생활지원 지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친자 검사비'와 '미혼부모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소송비' 같은 미혼부모 간의 자녀양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원 정책 지도도는 보통수준에 그쳤다.

청소년 미혼부모대상 부모교육에 관한 지도도가 가장 높은 것은 최근 이슈가 된 아동유기 및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1-2]과 이에 따라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정책에 관한 인식[48]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 인지에서 출산과 자녀양육 선택까지 주로 혼자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인한 낙인과 가족 및 대인관계로부터의 소외 경험 등 특정 가족형태에서 경험되는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실질적 문제가 함께 맞물려 양육부담이 가중되기 쉽다[9][25]. 따라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역할지원 대응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적 입장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 양육미혼모 지원에도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부자가정을 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부모의 모성 권과 자녀가 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3]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높은 편이지만[4-5], 다양한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상이 대학생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미혼모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 다수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며 약 80% 이상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편견과 영유아자녀양육으로 인해 다수의 양육미혼모들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0-22]. 최근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책으로 많은 미혼모 저소득가정에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자녀양육 비용에 비하여 책정된 지원비용이 너무 낮다는 지적[50][51]이 지속되고 있다. 미혼모자가정의 경우 법령에 준한 지원비 이외에 가족이나 기타 개인의 관계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9]을 고려하여 그 가족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자녀양육비 및 생활비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 친자검사비 및 인지청구 소송비 지원에 관한 대학생들의 지도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와 생부의 양육비 분담 문제가 2018년 초 불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인식이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친자검사비는 모자보건법령하에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에서, 인지청구소송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다[52]. 그러나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이행확정 8041건 중 실제 양육비 지급건수는 2576건(32.4%)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통계로 미혼모자가정의 양육비이행신청과 지급 실태를 살펴볼 자료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53]. 이 같은 상황에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21만 여명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54]. 인지청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나 부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을 위한 단계의 일환으로 양육비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친자검사비의 경우,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자신의 친생자임을 밝힐 때 필요한 절차차이기에 상대적으로 미혼모가 이용할 확률이 적은 제도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4-5], 미혼의 출산 및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미혼모보다 소수인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보인다.

셋째, 성별에 따른 위기임신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2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국가가 생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각 정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 또한 소수였다. 위기임신 지원 정책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친자 검사비 지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대 까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연구들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학생이 보다 높은 성지식을 보여 성과 위기임신 등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55].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실시된 위기임신 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도 조사[39]와 유사한 결과로, 새로운 세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관계없이 합의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 '친자검사비'에 대한 지지도가 남학생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만이 그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달리 여학생들이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과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양성 평등한 사회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성과 혼전임신 이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가부장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5]. 따라서 국가에서는 성과 임신, 출산에 대하여 부와 모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 및 이에 대한 정책적·실제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과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에 따른 위기임신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지지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별로는 위기임신 지원 정책 중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료보급', '산부인과 상담제도 도

입을 통한 계획임신 제도화',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가 제공되는 위기임신 지원센터' 정책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에서는 '재임신 예방교육'과 생활지원에 관련된 '생필품구입지원', '아동 의료비지원', '공동생활시설 거주 미혼모·부의 아동보육료 지원', '청소년 미혼모·부를 위한 시설확충', 자립 활동의 일환인 '검정고시비용지원'과 '자선형성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반대와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지원지지도 및 다수의 관련 시설 운영이 종교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3]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종교적 가치와 신념은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종교가 있을 경우 관련정책에 보다 지지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재학 이상의 18-29세 미혼남녀는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성교육의 마련을 통한 예방교육과 적절한 법령 마련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미혼부모에 대한 부모 역할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그 외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 중 다수의 항목에서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부지역 대학에서의 편의표집을 통해 응답된 설문지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여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및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

를 제언한다. 첫째, 서울과 경기권의 대학 소속 청년층 외에 다양한 연령과 학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을 표집 하여 관련 정책 지도도에 관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식조사가 진행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현재 시행 상황과 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접근성, 정책과 제도 수행의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http://news.joins.com/article/18141694>, cited 2018.4.27.
- [2]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713412\\_17808.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713412_17808.html), cited 2018.4.27.
- [3] 엄주희, “영유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유아기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pp.91-124, 2016.
- [4] 김혜영, 김정미, *전문가와 양육미혼모의 지원방향을 논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제20호, pp.1-8, 2012.
- [5] 성정현, 김희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1호, pp.33-58, 2016.
- [6]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 [7]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pp.97-115, 2017.
- [8] 이미정, “양육미혼모의 자립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양육모자립 세미나 & 해피맘 박람회,” 동방사회복지회, 제1권, 제2호, pp.9-25, 2015.
- [9] 박동진, 김혜성, 김희숙, 이설아, 엄주희, 권오용,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pp.323-372, 2017.
- [10] 여성가족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여성가족부, 2011.
- [11] 이미정,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1권, 제73호, pp.1291-1301, 2010.
- [12] <http://meta.narastat.kr/metat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01&kosisYn=Y>, cited 2018.4.27.
- [13] 여성가족부, *미혼모·부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 2016.
- [14] 이규영, 심인옥, “대학신입생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사회과학, 제34권, 제7호, pp.159-182, 2013.
- [15] 김정애, 이정열,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 및 성경험 예측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제40권, 제3호, pp.71-80, 2014.
- [16] K. Bryant-Comstock, A. G. Bryant, S. Narasimhan, and E. E. Levi, “Information about sexual health on crisis pregnancy center web sites: Accurate for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Vol.2, No.1, pp.22-25, 2016.
- [17] A. G. Bryant and E. E. Levi, “Abortion misinformation from crisis pregnancy centers in North Carolina,” *Contraception*, Vol.8, No.6, pp.752-756, 2012.
- [18] A. G. Bryant, S. Narasimhan, K. Bryant-Comstock, and E. E. Levi, “Crisis pregnancy center websites: Information,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Contraception*, Vol.90, No.6, pp.601-605, 2014.
- [19] D. Tsevat, J. Miracle, and M. Gallo, “Evaluation of services at crisis pregnancy centers in Ohio,” *Contraception*, Vol.94, No.4, pp.391-392, 2016.
- [20] V. Polaskow, T. Halskov, and P. Schultz Jù Rgensen, *Diminishedrights: Danish lone mothers*

- in international context*, The Policy Press, 2011.
- [21] S. Zhang and S. G. Anderson, "Low-income single mothers'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ve parenting pract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2, No.6, pp.889-895, 2010.
- [22] M. J. Creighton, H. Park, G. M. Teruel, and J. Teachman, "The role of migration and single motherhood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in Mexico,"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1, No.5, pp.1325-1339, 2009.
- [23]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24] 전재희,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영국 및 한국 비교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제7권, 제1호, pp.33-49, 2017.
- [25] 서경애, "십대 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1호, pp.281-308, 2009.
- [26] 성경현, 김지혜, 신옥주, "미혼모의 임신출산위험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2호, pp.277-309, 2015.
- [27] 임혜영, 이혁구,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3호, pp.53-78, 2014.
- [28] 김혜순, 이명희, "제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1호, pp.225-235, 2012.
- [29] 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44권, pp.91-125, 2013.
- [30] 안재진, 김지혜, "시설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제10권, 제4호, pp.605-624, 2006.
- [31] 홍봉선, "양육경험이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우울, 불안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2호, pp.43-72, 2013.
- [32] 문순영,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pp.73-103, 2015.
- [33] 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김나연, 정다운,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34] 최승희, "미혼모자시설 내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학교사회복지*, 제23권, 제12호, pp.281-306, 2012.
- [35] 변귀연, 김혜래, 이상희, "청소년 미혼모와 그들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1-22, 2009.
- [36]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pp.19-52, 2011.
- [37] 주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자립형 보호시설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5권, 제1호, pp.21-28, 2007.
- [38] 백옥현,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 관점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49-77, 2008.
- [39] 이주현, 유계숙, "청소년의 성 관련태도 및 부모됨의 동기가 청소년미혼부모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63-91, 2012.
- [40] F. Faul, E. Erdfelder, A-G. Lang, and A. Buchner, "G\*Power: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41] 보건복지가족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10.
- [42] 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운영 안내*, 여성가족부, 2010.
- [43] 여성가족부,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1.

- [4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월드휴먼브리지 미혼 모자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양육미혼모의 일터 제공 등 『엔젤맘 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2010.
- [45] 원희목, *초중등 교육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 발의안*, 국회, 2010.
- [46] 홍순혜, 김혜래, 이혜원, 변기연, 정재훈, 이상희,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 [47] 김남희, 박유진, 정현숙,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심리행동연구*, 제7권, 제2호, pp.17-42, 2015
- [4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이 시작이다,” 제2차 가족정책 릴레이포럼, 제1권, 제1호, pp.2-18, 2018.
- [49] 이미정,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2호, pp.79-107, 2011.
- [50] 양민욱, “초등학교 자녀를 둔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경험 이해,” *윤리연구*, 제99권, 제11호, pp.301-332, 2014.
- [51] 이은주, “미혼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제17권, 제4호, pp.625-642, 2013.
- [52]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81.do](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81.do), cited 2018.4.27.
- [53] <http://www.hankookilbo.com/v/09cf6c40c2524cecb3d98c0882400f33>, cited 2018.4.27.
- [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31152001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311520011&code=940100), cited 2018.4.27.
- [55] 김혜원,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성태도,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309-328, 2003.

저 자 소 개

이 설 아(Seol-Ah Lee)

정회원



- 2017년 8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아동가족학 석사)
- 2016년 1월 ~ 현재 : 인천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교육 담당

<관심분야> : 가족관계, 가족교육, 부모교육

김 희 숙(Hee-Sook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2년 10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 생명윤리, 성건강, 건강교육

권 오 용(Oh-Yong Kweon)

정회원



- 1983년 2월 : 고려대 법학박사
- 2003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복지 석사
- 2011년 ~ 현재 :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정신건강 법률, 생명윤리, 정신장애인과 아동인권, 사회복지

엄 주 희(Ju-Hee Eom)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강사·세종대,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 2017년 11월 ~ 현재 : 국가생명

윤리정책원 연구팀장

<관심분야> : 헌법, 공법, 생명윤리